

6월 23~28일 민주노총 총궐기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말한다

“이제
바꿔야 산다!”

- 박근혜 퇴진 • 노동운동 탄압 중단
- 민영화 · 규제완화 중단 •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 통상임금 정상화

6월 23~28일 총궐기투쟁 / 6월 28일 총궐기대회

피케티의
《21세기 자본론》을 둘러싼 논쟁

▶ 12~13 면

의료 민영화 강행
파업을 준비하는
병원 노동자들

▶ 16 면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 /
스페인 새 좌파 정당 포데모스

▶ 8~9 면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 교육개혁을 바란다

▶ 7 면

민주노총 총궐기와
노동자 투쟁

▶ 3, 4, 5, 7, 10, 11 면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6월 23~28일 총궐기에 동참하자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비극적 사건이다.

세월호 참사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대형 안전 사고들은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박근혜가 모든 책임을 유방언 일가와 해경 기구에 지우고 자신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되레 참사 원인의 일부인 신자유주의적 “국가 개조”를 하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국가 기관들과 기업들의 부패한 유착도 참사 원인의 일부인데, 이것도 지속될 것이다. IMF를 불러들인

1997년 경제 공황 이래 논평가들과 분석가들, 정책 입안자들은 마치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부패와 “정실[천민] 자본주의”를 끝낼 것처럼 수다를 떨었다.

하지만 엔론 부도 사태(2001)나 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2008) 등에서 보았듯이, 정실주의나 패거리주의는 단지 빈국이나 빈국 출신 신흥국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세계 최선진국이라는 곳에서도 거듭 발생하는, 자본주의 자체에서 비롯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윤 경쟁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미덕으로까지 격상된 사회에서는 부정직과 불법을 근절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윤 체제 하에서는 부패가 근절될 수 없는데 하물며 박근혜는 “경쟁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윤 경쟁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한결같이 추진해 왔다.

설상가상으로 박근혜는 국가 기관

들의 대선 개입을 처벌하도록 하기는 커녕 부패한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을 비호해 왔다.

그리고 윤창중부터 문창극까지 취임 이래 각종 인사 스캔들에서 보듯이, 박근혜 주위에는 1970년대 이래 정직성과 법률을 냉소한 채 선량한 보통 사람들에게만 법과 도덕을 설교하며 부와 권력을 쌓아 온 자들 투성이이다.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가 진귀한 천연기념물일 게다.

천연기념물

박근혜의 우파 측근들과 하수인들이 풍기는 썩은내가 진동해서 숨을 쉬기가 괴로운 서민들은 부패 문제를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로 인식한다. 서민을 대변해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은 평등과 민주주의를 자신의 가치에 선포하며 새겨넣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폐지도 같은 맥락임은 물론이다.

공공서비스, 특히 의료의 영리화·민

영화는 세월호 참사 못지 않은 비극을 보통 사람들에게 안겨줄 것이다. 물론 세월호 사건보다 훨씬 오랜 세월에 걸쳐 천천히, 조용히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훨씬 더 광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점도 있다.

이 모든 것을 박근혜가 표상한다고 보아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최고 국가기관을 과녁으로 겨냥한다고 해서 **충분하지는 않다.** 실질적인 동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물론 우리가 이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퇴진 요구를 내놓는 것은 일반적인 선전 구호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려면 시스템의 심장부인 이윤 창출 메커니즘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작용을 멈춰야 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 생산을 멈춰야 한다.

요컨대 거리 항의 운동인 **총궐기**와

산업 현장에서의 쟁의가 공동 작용하면 동반 상승 효과가 날 수 있다.

1백여 년 전쯤에 폴란드계 독일인 마르크스주의자 로자 룩셈부르크가 설명한 이러한 대중 파업의 동역학은 총궐기에 수반될 수도 있는 파업이 꼭 정치 파업이어야만 한다고 시사하지는 않는다. 각 부문의 고유한 요구를 내놓고 파업을 벌여도 괜찮다.

일단 경제 투쟁들이 충분히 큰 규모에 도달하면 국가 — **자본주의적** 국가이므로 — 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에 따르면, 파업에서 요구가 어떠한지보다 파업 참가 범위가 부분적(부분적)이나 전소 계급적이냐가 정치성 여부를 판가름한다. 레닌 말대로 **“계급의** 투쟁은 정치적 투쟁이다.”

설사 파업이 총궐기 기간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7월에 경제적 파업들의 물결이 일도록 투사들과 좌파들, 사회주의자들은 애써야 한다.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최미진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을 둔화,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출범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경제 위기를 맞아 공공기관을 대거 동원해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공공 지출이 급증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가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강하다.

박근혜 정부가 늘어난 공공기관 부채를 어떻게든 줄이라고 압박하며 긴축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내 소비 부진과 환율 하락 때문에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낮춰 잡을 전망이다.

그래서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부채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도 “공공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공기관 ‘정상화’와 더불어, 의료민영화 가이드라인·시행규칙 발표, 공무원연급 20퍼센트 삭감안도 정부의 긴축 정책 속에서 벌어지는 공공부문



박근혜 정부의 공격적인 긴축 추진에 맞서 투쟁을 조직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공격이다.

긴축이 꽤 추진된 유럽에서 복지·공공서비스 축소, 노동자 임금 삭감, 해고 등이 벌어졌다. 2009년 경제 위기 당시 부자와 은행들을 살리려고 돈을 쏟아붓더니,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르라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긴축도 마찬가지다.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으로 생긴 공공 부채를 이제 와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올해 예산 책정 과정에서 여성 장애인 지원 예산의 63퍼센트가 삭감됐고, 기초연금 공약도 사기극으로 끝났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는 말처럼, 공공기관 ‘정상화’의 주요 내용이 바로 민영화다. 정부는 부채 삭감

의 70퍼센트 이상을 ‘사업 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혔는데, 사기업에 사업을 이전하고 공공자산을 사기업에 팔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은 방만한가?

정부는 공기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이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피아’나 ‘원전 마피아’ 같은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이 권위주의 국가의 부속물 구실을 해 온 역사가 있다.

지금도 공공기관 임원은 정부의 낙하산으로 가득 차 있다. 이들이 공공기관을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삼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지지 않는 일들도 허다하다. 4대강 사업,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인천공항철도 민

영화 등등.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는 결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없다. 낙하산 인사가 여전히 많은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영화를 도입해 공공부문을 시장의 광기에 떠맡기겠다는 것일 뿐이다.

사실 공기업이 그 자체로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민영화 효과를 평가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민영화로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진 경우는 거의 없다. 2011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발표한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를 보면, “실증분석 결과 공적지분율이 높을수록 노동생산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공적소유권 기관의 경우 노동 투입 대비 효율성이 좋다.”

민영화로 수익성을 올린 경우조차 엄청난 요금 인상 때문이었다(통신사와 석유 기업이 대표적).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영국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민영화 과정에서 정리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일시적으로 수익성을 높인 경우는 있었으나, 그 효과는 대개 4년을 넘기지 못했다.

게다가 **수익성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공공성의 문제가 있다. 공기업은 필수 공공재를 안전하고 값싸게 제공하는 구실을 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들은 전국적 네트워크망이나 인프라 등을 만들고 유지하는 구실을 한다. 이것은 전 산업의 발전과 노동력의 이동 등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사기업이 투자하기는 어려워, 당장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국가가 유지해야만 한다. 여기서 생기는 부채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공공기관을 시장의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2008년 촛불항쟁과 지난해 말 철도 파업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민영화에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낙하산 관료의 통제도, 민영화도 아닌, 공공의 필요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지난해 철도 파업처럼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이야말로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다.

노동 교섭과 투쟁

한편,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제안했다. 단협까지 무시하며 노동조합을 공격하는 정부에게 대화와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 제안을 곧장 거절했다. 그리고 지방선거 후 더 강하게 공공부문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의 집요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건대, 투쟁이 충분히 심화·발전하지 않는다면 양보를 얻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6월 총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예고한 ‘정상화’ 반대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조직하는 데 중심을 뒤야 한다.

세월호 참사로 민영화와 외주화 반대, 규제 완화 반대, 공공성 강화 등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울렸음이 입증됐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과 복리후생 후퇴 문제와 공공성 훼손 문제를 결합해 적극 투쟁에 나선다면 연대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다

조명지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하고, 벌써 노동자 2명이 삼성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동료의 영정 사진을 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압력을 받은 사측은 교섭에 나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교섭조차 하지 않던 것에 비하면 진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염호석 열사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 생활임금 보장, 폐업센터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대부분의 요구에 노동자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잠시 교섭이 결렬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성취하기 위해 강건하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어차피 한 번에 교섭이 타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믿을 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 “이번에는 끝장 봐야 한다” 하고 말한다. 장기간 파업과 힘든 노숙 농성에도 노동자들은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삼성은 노동자들에게 굴복했다간 노동조합이 확대되고 다른 삼성 계열사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할 것이다. 가뜰이나 취약한 이재용 체제에서 그동안 온갖 탄압으로 억눌려 온 삼성 노동자들의 저항은 위험이 될 수 있다. 저들이 선뜻 양보하지 않은 것도 그래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들이 강하기만 하



“삼성이 책임져라” 삼성의 막대한 부는 이 노동자들을 착취한 결과이다. 삼성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인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다는 뜻은 아니다. 삼성이 반도체 산재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직접 교섭에 나선 것은 저들이 처한 처지의 한 단면을 보여 줬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이건희 왕국이 이재용 왕국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겠는가. 따라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버티고 싸우며 삼성그룹의 문제점을 계속 점정화하는 것은 저들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정지 상황도 나쁘지 않다. 진보진영

이 압승을 거둔 교육감 선거가 보여 주듯 여권과 박근혜에 대한 항의 정서가 상당하다.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노동자들의 투쟁이 살아나고 있다. KBS 노동자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전격적으로 파업에 들어가 승리했다. 케이블방송·통신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고,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도 6월 말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삼성의 곤란한 처지를 기회 삼아 투쟁을 지속한다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사측이 12일에 교섭 재개를 요청한 것도 삼성전자서비스 파업이 민주노총 총궐기와 연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지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삼성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형언키 어려운 용기로 투쟁하고 있습

니다. ... 서로 다독이며 등 두드리고 웃으며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읍시다. ... 정동진 앞바다에 달려가 호석이 영혼 보내 주며 뜨겁게 포옹하고, 우리들의 직장, 애증의 일터 삼성전자서비스로 돌아갈 것입니다.” “75년 역사에서 노조와 단 한 번도 단협을 맺어본 적이 없는 삼성 ... 우리가 삼성과 단협을 맺는 것은 역사적 패괴이고, 우리 스스로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4대 재벌 간 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 투쟁과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을 지원하는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 중이다. 또, 수개월간의 투쟁으로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투쟁 채권 발행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계획들을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더 확대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과 KBS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월호 참사로 증폭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과 분노를 노동자 투쟁으로 연결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

자들이 전진한다면 하반기 투쟁을 준비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북돋고, 전체 투쟁에 더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다.

또, 삼성전자에 일하는 노동자만 10만 명에 이른다. 삼성에 민주노조의 깃발을 꽂는 것은 노동운동의 큰 전진일 것이다. 따라서 전체 노동운동 진영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반으로 삼성에 민주노조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불굴의 용기로 싸우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노동자 연대를 보여 주자.

조명지



열사청산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재용의 경영 승계

삼성에버랜드가 이사회에서 내년 1분기 증시 상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인 이재용은 자산을 수백 배 불릴 수 있게 됐다. 고작 48억 3천만 원으로 사들인 주식이 몇 조에 달하는 재산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



버랜드를 상장해 이재용의 지분가치가 늘어나면 삼성 그룹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도 강화될 것이다.

1996년 유학에서 돌아온 28살 철없는 재벌 2세였던 이재용은 이견회로부터 받은 돈 61억 원으로 이제 재산 수조 원대를 손에 쥔 삼성의 차세대 총수가 된다.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과정은 이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견희 일가가 회사의 부를 강탈하고 마음껏 누리는 동안 정작 삼성의 부를 만들어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다.

조명지

이 캠페인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외국에서만 4천 명이 참여했다.

또, 지난 5월 국제노총 세계총회는 한국을 노동감시국으로 분류하고, ‘세계 최악의 CEO’ 후보 9명 중 하나로 이견희를 뽑았다.

성지현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이정원

6월 9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던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중 하나였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항철도는 1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부채와 함께 철도공사 소유가 됐다. 정부는 2009년에 적자에 시달리며 파탄 직전에 이른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 떠넘겼다. 이는 사실상 국유화 조치였다. 정부는 이제 이 공항철도의 소유와 운영을 민간에 팔아 넘겨 다시 민영화하려 한다.

정부는 '지금도 공항철도가 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다' 하며 공항철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우긴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애초부터 공항철도 매각을 노리고 지금까지 공공기관 지정조차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줄 뿐이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 매각으로 차익 6천억 원을 남길 수 있고, 정부도 해마다 정부 보조금 3천억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항철도가 민영화되면 승객들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공항철도가 민영으로 운영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용객 부담

당시 민영 공항철도의 요금은 수도권 전철보다 적어도 세 배 이상 비쌌고, 환승 할인도 되지 않아 이용객의 부담도 컸다. 그리고 정부는 민영 공항철도에 2년간 2천7백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결국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가 저렴한 철도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민영화된 공항철도 운영자는 수익을 내려고 요금을 대폭 인상하려 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철도 요금 인상을 가능하게 할 철도사업법 개정도 추진해 왔다.

게다가 공항철도 민영화는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 중 일부다. 수서KTX와 공항철도 민영화는 '경쟁하는 복수의 철도 운영'을 기정사실화해 철도 다른 부문의 분할 민영화를 더 촉진할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이다.

따라서 공항철도 민영화를 막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는 공공서비스 악화를 겨냥한 것이므로, 여기에도 함께 맞서야 한다.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되어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무인역 증가, 차량·선로 정비인력 감축과 외주화, 기관사 1인 승무, 강제전출 등이 대표적이다. 철도공사는 지금 경영정상화 대책 실적 내기에 혈안이 돼, 그 위험성에 눈을 감은 지 오래다.

게다가 사측은 지금 또 한 차례 강제전출을 밀어붙일 계획이다. 6월 중에 열차와 역 직종에서, 7월에 운전과 차량 등 나머지 직종에서 강제전출을 한다는 것이다.

사측은 지난 번 강제전출 때처럼 직종별로 노동자들을 이간질시켜 각개 격파하는 악랄한 수법을 쓰고 있다.

이간질

우선 6월에 역과 열차 직종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일명 '순환전보'가 그렇다. 사측은 두 직종의 노동조건 격차 때문에 열차승무직에 대한 선호가 높은 점을 이용하려 한다. 두 직종이 단결하기 어려운 약점을 비집고 강제전출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사측은 열차승무직 노동자들에 대해 근무평점을 근거로 강제전출 대상

자를 선발하겠다고 한다. 사측의 강제전출이 시행되면 두 직종 노동자들 사이에 경쟁이 강화되고 사측 관리자에 대한 '줄 서기'를 강요 받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 사측이 추진하는 '역-열차 순환전보'는 함께 막아 내야 한다. 그리고 노조 내에서 충분히 토론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역무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도 함께 싸워야 한다.

무엇보다 사측은 이렇게 두 직종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공격하고, 이후 7월에는 나머지 직종을 공격하려 한다. 사측의 이런 공격이 먹혀 들면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인사권과 통제력이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 강제전출을 막기 위해 노조 전체가 함께 싸워야 한다. 철도 내 활동가들은 노조 중앙이 투쟁 계획을 내놓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 직종이 단결해 싸우자고 호소하며 현장에서 투쟁을 조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투쟁은 철도 안전을 지키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 최근 열차 사고가 급증해 철도가 제2의 세월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철도 안팎에서 끊이지 않는 지금은 지지와 연대를 확대하기 유리한 상황이다.

사측이 다시 한 번 대규모 징계와 인력감축, 강제전출을 강행하려는 것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 투쟁을 잘 해 나가야 하반기에 예고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에 맞선 투쟁도 더 성공적으로 건설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공항철도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새빨간 거짓이었다 2013년 11월 30일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결의대회.

철도 노동자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철도공사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보복성 징계와 탄압을 퍼붓고 있다.

사측은 지난 2월 25일 경교 파업과 강제전출·1인승무·업무이관 등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이유로 1백9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징계 대상이다. 심지어 현장조합원 수십 명도 해고하겠다고 한다.

사측은 또 지난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무려 8천여 명에 대한 징계도 착수하려 한다. 최근에는 지난해 파업에 대한 손해·가압류 청구액 1백62억 원에 더해 2백40억 원을 추가로 청구하려 한다.

철도공사가 이렇게 악랄한 징계·가압류 폭탄을 퍼붓는 것은 그간의 투쟁에 대한 보복 때문만은 아

니다. 이는 앞으로 민영화·구조조정을 지속·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한 청량리 기관사는 이렇게 말했다. "징계는 복지 축소 등 개악안을 밀어붙이고 하반기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다."

황당하게도 사측은 노조에 징계 최소화와 철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맞바꾸자는 식의 가증스런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는 징계가 얼마나 명분이 없는지를 잘 보여 준다.

안전을 위한 투쟁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투쟁은 우리의 안전과 생명과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이다. 실제로 사측이 추진한 각종 구조조정은 철도를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강제전출된 노동자들은 생소한 업무로 숙련도가 물거품이 돼 사고 대처 능력이 약화됐다. 청량리 기관사들은 안전시스템이 미흡한 중앙선에서 여객열차를 혼자 운전하며 자칫 잘못해 큰 사고라도 날까 봐 바짝 긴장하며 운전하고 있다. 서울 차량 노동자들은 화물열차 출발검수 업무를 역 수송원들에게 넘기면 열차 안전이 위협받는다 고 거듭 경고했다. 이는 얼마 전 오봉역 노동자의 비극적 죽음으로 현실이 됐다.

노동자들은 바로 우리의 안전을 위해 투쟁한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부당한 탄압에 맞선 투쟁에 연대하자.

김은영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김문성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현오석은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하라고 독려했다. 우리는행민영화 계획도 같은 날 발표했다.

역시 같은 날 철도공사는 민영화 반대 파업과 1인 승무 저지 투쟁 등을 이유로 1백95명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철도 민영화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러 청와대 앞으로 가려던 행진을 원천 봉쇄하더니 결국 69명을 연행했다. 일부에게는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1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고압 송전탑 공사 강행을 위해 경찰 폭력을 휘둘렀다. 대부분 70대인 어르신들, 수녀 등 신체적 약자들 수십 명을 끌어내려고 남성 경찰 2천여 명을 동원했다.

이런 조치들을 상징적으로 모아서 보여 준 것은 극우 논객을 국무총리 후보에, 공작정치 전문가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에 지명한 일이었다. 연이어 발표한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 개편에서는 강경 신자유주의자들과 공안검사 출신이 중용됐다. (▶ 관련 기사 2면)



인사 참극으로 가는 문창극 발탁 박근혜의 인적 기반이야말로 적폐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는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민영화, 규제 완화, 저질 일자리 확대, 복지 삭감, 노동운동 탄압 등은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다. 그것이 경제 위기 속에서 우파 지배자들이 뿔뿔 뿜쳐 박근혜를 지지·지원한 이유다.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가 언제 한국 경제를 덮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의 조급함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최근 김용판 무죄 판결이나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직 박탈 대법원 판결은 이런 지배계급의 정서가 부분적으로 드러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KBS 파업 승리

그런데 이런 고통전가 드라이브가 여태 본격 시동을 걸지 못한 것은 조직된 노동운동이 버티며 저항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기업 규제 완화를 말하면서 한 말, '처부술 원수'는 본질적으로 조직노동운동을 가리키는 말

이기도 하다.

따라서 박근혜의 공세는 선거를 의식해 미뤄 오거나 저항 때문에 지연돼 온 우파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이제는 실행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이 선거 승리에 따른 자신감 때문은 아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세월호 참사 같은 노동계급 전반이 예



민하게 반응하는 쟁점에서는 노골적으로 우파적으로 나오질 못한다.

선거 다음 날 의결된 KBS 이사회의 김환영 해임제정안에 박근혜는 군소리 없이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유가족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요구를 말로는 수용한 상태다.

KBS 파업 승리는 벌써 효과를 냈다. <KBS 뉴스9>은 11일 "일제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창극의 과거 교회 강연을 특종 보도했다. 밀양 진압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런 현상들은 박근혜가 여전히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아래로부터의 도전이 거세지면, 집권당 내분이 조기에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문창극 망언 보도 이후, 각계 여론은 물론 집권당 안에서도 총리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와 세월호 선원 재판이 시작된 것도 정부에겐 부담이다.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 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직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조정도 회색한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진보정당의 의원

이 한미FTA를 막겠다고 행동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또한 그것은 상징적 퍼포먼스 수준의 행동이었다.

살인·폭력 진압이라면 뒤지지 않는 이 나라 통치자들이 이 정도를 두고 '무법천지' 운운하며 의원직을 박탈한 것은 가증스럽고 짜증나는 일이다.

노동운동이 작업장과 거리에서 저항에 앞장서자

보건의료, 철도, 공공부문 노조들이 박근혜의 신자유주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갖추고 있다.

금속노조도 통상임금 등으로 임단투를 준비하고 있다. 새물결인 삼성전자서비스, 케이블방송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투쟁에 나서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의 주 동력도 조직 노동자들이었다. 작업장 투쟁들과 세월호 참사 항의가 만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처럼 경제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조직 노동자들과 싸워야 하므로 박근혜는 강성 우파, 신자유주의, 친박 등의 세력자 코드 인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박근혜와 맞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할 세력은 역시 조직 노동자들이다. 노동운동 스스로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 박근혜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드라이브에 맞서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1996년 김영삼

정부처럼 노동계급 전반을 동시에 공격하다가 일반화된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처럼 지배계급이 대처 방법을 놓고 분열할 수도 있다.

칼날

따라서 노동운동이 제대로 저항 태세를 갖춘다면, 박근혜는 칼자루를 쥔 게 아니라, 칼날 위에 선 처지가 될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통치자들에 대한 계급적 분노를 끌어올린 지금, 노동운동은 노동계급 고유의 (즉, 착취에 저항하는) 방법을 사용해 싸워야 한다. 즉, 자본주의적 우선순위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을 발휘하는 투쟁(파업)을 벌여야 한다.

세월호 참사 같은 계급 문제도 적극 항의해야 한다. 6월 말 총궐기가 하루 행동에 그치지 않고 노동계급의 파업에 기반한 투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웹사이트 온라인 기사(<http://wspaper.org/article/14549>)를 보시오.

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

[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참패를 못 시킨 실망감과 최근 공세 때문에 이런 시각이 호응을 얻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평가와 전망은 일단 실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득표 합계도,

광역단체장 득표 합계도 야권에 뒤졌다. 서울에서 크게 졌고, 텃밭인 부산, 대구 등에서도 득표가 줄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구해 줘쇼'로 선거를 치른 부산시장 득표율은 박근혜의 대선 득표율(부산)보다 10퍼센트나 하락했다.

정몽준이 얻은 표는 서울의 새누리당 정당득표보다도 적다. 우파 결집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이 민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후보들에게 졌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 득표는 4년 전보다 전국에서 골고

루 성장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 투표는 있었지만,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심판론'의 온전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었다.

▶ 7면으로 이어짐



사진 출처 (교육감당)

‘진보 교육 시대’의 관건은 대중 운동의 성장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우파는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시도하며 반동적 공세에 나선 것이다. 교총이 선거 직후인 5일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발표했다. 9일에는 새누리당이 직선제 폐지를 공론화했다. 이윽고 대통령 산하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2일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잠정 정했다고 한다.

우파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 선거”로 변질됐으므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위선을 떨며 이데올로기·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공세는 교육 정책과 제도 개선 압력에 맞서는 한편, 진보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다. 실제로, 7월 1일에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들이 공약을 이행하려 하면 교육부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쟁점들이 많다.

자사고

1차 관문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올해 출범 4~5년을 맞는 자사고의 재지정 여부가 곧 평가

를 거쳐 8~9월에 결정된다. 자사고의 지정·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취소할 때는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지만 말이다.)

전체 자사고 49곳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으니만큼 서울 지역의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초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당선자의 자사고 정책은 다소 모호하다. 자사고 폐지를 분명히 주장하지 않고 엄격한 평가 실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교육감 당선자는 자사고 평가에 새 평가지표(일반교 영향력 평가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은 서울시의 자사고 지정 취소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단 하나라도 지정 취소한다면 교육부와 정치적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파는 이를 정치적 집결의 기회로 이용할 것이다. 이미 우파 단체들이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박근혜 퇴진 선언을 한 교사 1백23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우파 언론들은 이데올로기 공격을 퍼붓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은 이런 공세에 굴하지 않고 진보적 목소리를 울곧게 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 개악을 비판한다면 교육 개혁을 위한 촉매제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은 재정과 이데올로기적 압력 등을 가해 진보 교육감을 압박해 개혁을 후퇴시키고 좌초시키려 들 것이 불보듯 뻔하다.

아래로부터 대중 운동이 존재하지 않는 한 진보 교육감은 중앙 정부와 검찰, 사법부 등 국

가 기구와 자본가, 보수 언론 등의 보수적 압력에 휘둘리기 쉽다.

촉매제

따라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이 진정 ‘진보 교육 시대’로 이어지려면, 관건은 “보수와 진보를 초월”해 중앙 정부나 시·도지사-교육청의 “원만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개혁을 위한 대중 운동이 성장하는 것이다.

세월호 정국을 거치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반감이 더 커졌고, 지난해부터 노동운동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교육 개혁을 위한 대중 운동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다. 전교조 교사들의 자신감과 투지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다. 경제 위기로 박근혜 정부는 복지를 삭감하고 노동계급에 대한 전반적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경제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기 위해 지배계급은 교육제도에 대한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하려 한다. 교과서 국정화·전교조 불법화 시도는 그 일환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이 실질적 교육 개혁으로 이어지려면 ‘교육의 정치 중립’ 이데올로기를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진보 활동가들은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는 쟁점을 노동계급적 관점에서 더 선명하게 주장하며 아래로부터 대중 행동을 고무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는 교육’,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은 거리와 학교에서 저항이 성장하면서 함께 성장할 것이다.

정진희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국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등록을 세 차례 거부한 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결정한 점, 철도 파업 노동자를 대량 해고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한국과 함께 5등급을 받은 국가에는 중국·나이지리아·방글라데시·이집트·파테말라·라오스·잠비아·짐바브웨 등이 있다.

물론 박근혜는 국제적 비난과 망신에도 안면물수다.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할 생각이 전혀 없다. 박근혜가 교육부장관에 내정한 김명수도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당연”하다고 말한 자다.

이뿐 아니라, 7월에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려 한다. 노동 유연화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고, 그 일환으로 시간제 교사제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연금 적자 운운하며 공무원 연금 지급액도 20퍼센트 삭감하겠다는 개악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될 전교조를 약화시키려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단순히 법적적 판결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인 이유이다.

반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전교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전교조가 교육 혁신 운동에 기여한 점을 존중한다.

한 예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수백만 명이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전교조와 교육운동 단체 등이 추구해 온 교육 혁신 운동에 큰 기대감”(전교조 성명서)을 갖고 있는 것이다.

6월 12일에는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이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라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재판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다. 반반이다.

그러나 우리는 6월 19일 재판을 그저 기다릴 수는 없다.

현재 전교조는 정부의 ‘법외노조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지도부 철야 농성, 조합원 탄원서 조직, 지부별 결의대회, 지회별 1인 시위 등을 조직하고 있다.

지난해 규약시정명령 거부 캠페인을 주도한 활동가들도 기층에서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교조가 재판에서 이긴다면 전교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공격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할 때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많은 노동자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재판에서 지게 되면 6월 27일 조퇴투쟁과 7월 12일 교사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다. 필요한 계획이다. 재판에서 패하는 게 전교조가 정부 공격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조합원 압도 다수는 지난해 10월에 설령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정부 공격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쪽에 선 바 있다.

김현옥 전교조 조합원

▶ 6면에서 이어짐

그러므로 선거 대안이 부재한 단체장 선거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달리) 정권 심판 정서가 선택지를 찾기 힘들었다.

단순히 당선자 수 등만 보고 선거 결과와 그 맥락을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조직 노동운동이 살아나고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아직 충분히 강력한 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치락뒤치락하는 계급 세력관계가 간접적으로 반영돼 여권이 그럭저럭 참패는 모면하게 된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 준 정치적 양상은 박근혜 정부에 항의하려고 여권 밖 정당들에게 투표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그리고 많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 다수가 박근혜 정부를 지지한다는 따위의 부정확하고 비관적인 분석은 일부 온건한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투쟁을 제약할 핑계거리만 줄 뿐이다. 박근혜 퇴진 같은 급진적 요구와 노동운동과의 연대를 멀리하는 식으로 말이다.

김문성

스페인

새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여전히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겪는 스페인에서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새로운 정당 포데모스를 건설하는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데이브 수엘이 전한다.

스페인에서 새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는 지난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서 1백만 표를 훌쩍 넘겨 득표하며 4위를 차지했다. 창당한 지 넉 달 만에 거둔 놀라운 성과이다.

이번에 당선한 유럽의회 의원 다섯 명 가운데는 교사와 과학자도 있고, 대학 강사인 파블로 이글레시아스도 있다. 이글레시아스는 좌파 텔레비전 프로그램 ‘라 투에르카’를 진행하며 주목을 받았고 이후 포데모스를 창당했다.

포데모스는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서 가난을 줄이고, 부자들이 탈세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스페인 정부가 유럽연합과 합의한 내용도 거부한다. 그 합의에 따라 정부는 은행가들의 빚을 갚아 주려고 엄청난 삭감 공격을 했다.

이번에 선출된 포데모스 의원들은 세비를 최저임금의 세 배 미만으로 받겠다고도 약속했다. 이것만 봐도 포데모스가 [스페인의 양대 정당인] 국민당(PP, 보수 성향)이나 사회당(PSOE, 사민주의 성향)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집권당인 국민당은 계속 긴축을 강요하고 있고, 사회당도 집권 시절에 공공지출을 제한하기 위해 개헌했다. 심지어 공산당이 주도하는 좌파 연합(IU)조차 불명예스럽게도 긴축을 자행한 지방 정부들에 참여했다.



광장 점거 운동의 분노를 모아 탄생한 포데모스 유럽의회 선거 결과에 환호하는 이글레시아스(가운데)와 포데모스 활동가들

포데모스는 무엇이 다른가?

그러나 포데모스가 다른 정당들과 다른 새로운 특징은 ‘서클’들이다. 서클이란, 수백 명이 모여 토론하고 조직하는 대규모 회합이다. 활동가들이 당 지도부와 사전 접촉 없이 서클을 시작하는 경우도 흔하다. 유럽의회 선거 전까지 서클 수백 개가 생겨났고, 선거 끝나고는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세비야 시에서 포데모스 후보로 출마했고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인 엔루차[투쟁 속에서]의 회원인 헤수스 카스티요는 서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에는 도시 곳곳에, 마을 곳곳에 서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글레시아스도 그중 하나고,

긴축에 반대하는 운동 안에서 자라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도 그 요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타 정당들과는 다르다는 인식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보통은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열정과 희망을 담아 목소리를 내면 믿습니다.”

포데모스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정치인들은 포데모스의 잠재력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여론조사에서는 포데모스가 겨우 1퍼센트 득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실제로는 8퍼센트를 얻었다.] 그러나 포데모스는 갑자기 튀어나온 정당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스페인이 겪은 위기와 그에 맞선 저항이 낳은 산물이다.

2010년 총파업도 있었지만 지금의 시위들이 본격적으로 터져 나온 것은 2011년 5월 15일에 시작된 ‘5월 15일 운동’ 때부터였다.

당시 수백만 명이 도시 광장을 점거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5월 15일 운동과 그 뒤를 이은 투쟁들에는 경제 위기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특히 청년들의 분노가

컸다. 당시 청년 실업률은 50퍼센트에 육박했고 그 뒤로도 계속 높아졌다.

또한 주택을 압류 당한 사람들의 연이은 자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스페인에서는 그런 주택 압류가 해마다 10만 건가량 된다.

주택 압류

그러나 5월 15일 운동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자 그 정당들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자각이기도 했다.

처음에 5월 15일 운동은 공식 정치를 모조리 거부하고 그 대안을 거리에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 활동가들이 대부분 지금 포데모스 서클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저널리스트 니코스 루도스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운동이 이런 성과와 운동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었습니다.

“5월 15일 운동 이후 마드리드에서는 투쟁으로 의료 민영화를 막기도 했고, 주택 압류에 반대하는 거대한 운동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발레아레스 제도에서는 교사들이 대규모 파업을 벌여 교육 개악을 막기도 했습니다. 그런 운동들은 아래로부터 건설됐고 대중 총회를 통해 노조 관료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은 크게 성장했지만 정치적으로는 힘이 미약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도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운동은 국제적이거나 심지어

어 전국적인 영향력도 발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운동들 덕분에 우리가 다수이고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이 운동을 정치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포데모스는 이런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진이다.

그러나 이제 첫발을 떼었을 뿐이다. 헤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클에는 언제나 새로 온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서클에서 우리는 여러 주장들을 놓고 토론합니다. 채무 변제 거부, 군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나 개헌 과정 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클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장소입니다.”

혁명가들은 포데모스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포데모스에는 정치 경험이 각기 다른 사람들과 정치에 처음 발을 들인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그중에는 엔루차 회원들처럼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이글레시아스가 이끄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지도부는 시리자를 모델로 삼는다. 시리자는 그리스의 급진좌파 정당으로 다음 선거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포데모스 지도부는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정부를 본받으려 하기도 한다.

포데모스 정책은 많은 부분 모호하다. 그래서 포데모스에는 자본주의 국가를 타도하려는 사람들과 자본주의 국가를 [인수해] 운영하려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

포데모스는 카탈루냐 독립 같은 중요한 쟁점에서도 입장이 불분명하다. 또한 [스페인에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신 유럽연합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계급보다는 시민에, 진정한 문제인 국가보다는 정치적 ‘카스트’들을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시험대

위기와 그에 맞선 투쟁이 계속되면 새로운 쟁점들이 불거질 것이고 포데모스는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다. 혁명가들이 서클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이 서클의 성장만큼이나 중요한 까닭이다.

헤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포데모스는 이제 갓 생겨났고 아직도 건설 중인 정당입니다. 정치적 토론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조직해야 할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인 걸요.

“포데모스는 운동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참여할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엔루차 회원들은 포데모스에서 각종 투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업장에서 사람들을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업장이야말로 사람들의 힘이 강력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포데모스는 혁명 조직이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지금의 포데모스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싸우고 있지만, 자본주의 자체에 도전하려면 더 커져야 합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 번역 김종환

▶ 스페인 입헌군주제 폐지 운동에 관한 기사가 본지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서는 대중 시위

실베스트르 자파르, 데이브 수엘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여러 단체가 국민전선(FN)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전국적 하루 행동의 날을 개최하자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6월 26일로 계획돼 있다. 이 날은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의 전환점이 될 지도 모른다. 6월 26일 행동은 국민전선이 5월 25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벌어진 주요한 항의 시위들을 잇는 행동이다. 국민전선은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센트를 득표해 1위를 했다.

반파시즘 활동가들은 6월 7일에 거리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이 행진은 지난해에 극우 조직의 회원들에게 살해된 학생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다.[프랑스 전역에서 수천 명이 시위를 벌였다.]

클레망 메리크

유럽의회 선거 직후인 5월 29일에는 1만 명이 국민전선에 항의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주로 청년이었다. 이 시위는 여러 좌파 정당에 속한 다양한 청년 조직들이 제안해 급박하게 열린 것이었다.

이 제안에는 집권 사회당(PS)의 청년 조직청년사회주의 운동(MJS)를 비롯해 좌파전선(FG)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청년 조직이 참여했다. 여러 학생회와 반파시즘 단체들도 참가했다.

파리에서는 4천 명이 넘게 모여 행진했고, 툴루즈에서는 1천5백 명, 리옹에서는 1천 명, 낭트·보르도·마르세유에서는 5백 명이 행진했다.

“1세대든 2세대든 3세대든, 우리는 결국 모두 이주민의 자녀다”, “르펜, 너는 이제 끝났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왔다” 하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2002년 4월에 일어난 대중 시위를 떠올렸다.[파리에서만 1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당시 나치인 장-마리 르펜이 대선 1차 투표에서 2위를 해 결선에 진출했다. 그는 국민전선의 현 대표 마린 르펜의 아버지이다.

사람들은 이번 시위를 보며 지난해 가을에 일어난 학생들의 시위도 떠올렸다. 학생들은 정부가 이주민 학생들을 강제 추방한 것에 항의해 거리 시위와 동맹휴업을 벌였다.▶본지 114호 ‘프랑스 — 인종차별 정책에 대한 정의로운 분노가 폭발하다’를 참고하십시오.)

이 운동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차별과 파시즘에 반대하는 정서가 힘을 확 얻었다. 그 덕에 더 큰 조직들(예를 들어 사회당과 연계된 조직들)도 국민전선에 맞서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됐다.



5월 29일 국민전선 반대 시위.

국민전선이 노동자와 청년의 지지를 얻고 있는가

국민전선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상 최고의 성공을 거뒀지만, 대다수 프랑스 사람들은 국민전선과 국민전선의 기치를 거부한다.

언론은 국민전선이 노동자와 청년의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갔다고 호들갑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와 청

년의 기권율이 가장 높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민전선은 다른 [사회]집단보다 노동자와 청년들에게서 표를 가장 적게 얻었다.

노동조합에서 국민전선에 대한 지지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도 많다. 그러나 이런 보도는 노동조합 활동가 극소수만이 참가한 온라인 여론조사

에 근거한 것이다.

국민전선은 나치 이미지를 벗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전선은 여전히 파시스트 정당이다. 국민전선의 핵심에는 홀로코스트 부인론자, 히틀러 숭배자, 폭력적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다.

주류 정당들이 더 우경화하고 국민

전선이 선거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다양한 소규모 파시스트 조직들이 소수 인종과 좌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자신감을 얻었다.

진짜 위험한 것은 국민전선이 선거에서 거둔 성공을 이용해 파시즘 운동을 건설하고 거리를 장악하는 것이다.

국민전선이 성장하는 데 일조한 집권 사회당

국민전선이 성장하는 데는 사회당도 큰 책임이 있다. 사회당은 인종차별적 연사를 하며 무슬림, 로마인,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인종차별적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주만 해도 경찰이 칼레 근처에 있는 이민자 거주지를

습격해 수백 명을 강제 추방했다.

사회당은 프랑수아 올랑드가 대통령이 된 뒤로 인기가 뚝 떨어졌다. 그럼에도 사회당은 학생운동과 노동조합운동에서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

이런 세력들이 국민전선을 막기 위

한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6월 말 파리에서는 극우에 맞서 싸우는 지역 운동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린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6호 / 번역 차승일



MARXISM
맑시즘 2014

맑시즘 2014 관련 주제:
‘트로츠키와 반파시즘 투쟁’
‘파시즘, 유로 파시즘, 인종차별적 포퓰리즘’

※ 자세한 정보는 12면을 참고하세요.

추천 소책자



파시즘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레온 트로츠키 지음, 최일봉 옮김
74쪽, 3,000원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국민전선 전 대표 장-마리 르펜의 나치 본색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나치 강패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5월 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

센트를 득표했다. 이 결과를 보며 사람들은 항의 시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한편, 국민전선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명예대표인 장-마리 르펜이 망언을 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그는 한 유대인 가수가 국민전선을 비

판한 것에 이렇게 응답했다. “다음번에 우리는 한 가마(oven)분량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을 불태워 죽인 것을 연상시키는 말이었다. 장-마리 르펜의 말을 녹화한 영상은 국민전선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었다.

국민전선은 이중 전략을 사용하면서

집권 역량이 있는 파시스트 정당을 건설하려고 한다. 국민전선은 선거에서 새로운 지지를 얻으려고 파시스트 이미지를 탈색시키려 애쓴다. 그러나 내부 결속을 다지려 하며 매우 도발적인 주장도 한다.

장-마리 르펜의 혐오스러운 망언은

국민전선에 역풍이 되는 듯하다. 국민전선은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했다. 국민전선의 지도적 인물들은 이 발언과 거리를 두고 있다.

데이브 수엘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7호 / 번역 차승일

통상임금 확대 위해 6~7월 투쟁을 건설하자

김우용 기아차지부 조합원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이다. 최근 시작된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오전·오후 8시간 근무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버리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 없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공격적인 3대 요구안까지 제시했다.

우선 사측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과 중심의 직군제로 임금체계를 개악하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 등을 볼 때,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직무평가와 성과에 기초한 차등임금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인건비를 낮추고 차등 임금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해치려는 것이다.

사측은 이와 함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품질 경쟁력 제고가 필수”라는 것이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수익을 늘리겠다는 뜻이다.

사측은 노사가 함께 자동차 판촉 활동을 하자고도 제안했다. 이는 노조에 “책임 있는 동반자 역할”을 요구하며 노사협조주의를 부추기고 임금·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와 투쟁을 자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사측은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강경한 태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경쟁 격화

박근혜 정부도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 확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 개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퇴직자들에게까지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노동부 지침에서 정부가 제시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를 비롯해 전체 사업장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정부는 4월 국회 노사정 소위에서 시행령 개정이라는 핏수를 부릴 가능성도 얼핏 내비쳤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에 맞서 투쟁해야 한다. 정부가 법·제도 정비로 자본가들을 편들려는 마당에,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파업이라는 실질적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아쉽게도 그동안 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지부 지도부는 통상임금을 임단투 때 대응할 문제로만 대처해 왔다. 그 틈을 이용해 정부와 자본은 일부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임금체계 개악(직무성과급제, 신입사원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등)까지 준비하고 쟁점화해 왔다.

통상임금은 단위 사업장 임단투의 주요 쟁점일 뿐 아니라, 법·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는 정치적 쟁점이다. 이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계급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공격의 일부다. 따라서 금속 노동자들이 단결해 6월부터 힘 있게 투쟁하며 7월 말 시기집중 임단투로 이어가야 한다.

체불 임금

한편, 최근 대법원은 한국GM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체불소송에 대해 ‘신의칙’ 적용 여부를 재심리하라고 파기환송 조치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 지급으로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할 여지가 있다”며 사실상 사측의 편을 들어 줬다.

물론 서울지방법원이 아시아나항공 소송에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줬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법원 판결만 쳐다 보고 있어서는 도둑맞은 통상임금과 미래의 임금까지 모두 빼앗길 수 있다. 현대·기아차지부는 통상임금 소급적용 문제를 소송으로만 대처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올해 임단투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8+8 조기 도입이다. 사측은 8+8 도입에 앞서 생산량 만회를 위해 곳곳에서 시간당 생산대수를 늘리려 한다. 한편으로는 이중임금제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임금체계 개악 시도와 노동강도 강화에 맞서야 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월급제 도입 요구도 중요하다.

지금 정세와 현장 조합원들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패배했다. 현대기아차지부 대의원대회 결과를 보면, 현장의 불만이 많다는 점도 엿볼 수 있다. 예년보다 현장 발의 안전이 많았다. 기아차의 경우 현장 발의 안전이 단협 요구안에 상당히 많이 반영됐다.

지금부터 이런 불만과 요구를 잘 조직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금속노조가 세월호 참사와 통상임금 법 개악, 비정규직 문제, 산업재해 등을 결합해 민주총총의 ‘6월 총궐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는 7월 시기 집중 임단투에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다.

12년 만에 5천 명이 모인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의대회

6월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결의대회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에 시달려온 노동자들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보여 줬다.

민주노조 당선 이후 12년 만에 5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동지들이 차디찬 시멘트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을 보여 주는 것 같아 감동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현대중공업노동조합

공동 파업에 나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6월 10일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씨앤엠 정규직과 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정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다. “재하도급 방판 금지, 매각 시 고용 보장, 생활임금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씨앤엠은 당기순이익이 5백억 원이 넘고, 티브로드는 이익잉여금이 2천억 원이 넘어요. 쌓아 뒀으면 노동자들에게 줘야 합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는커녕 노동조건을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데만 골몰한다.

“생활임금을 보장하랬더니 티브로드는 실질임금을 동결하고, 씨앤엠은 오히려 임금을 20퍼센트 삭감합니다. 그러고는 일당 20~25만 원짜리 대체인력을 쓰고 있어요.”

노동자들은 씨앤엠의 대주주인 맥쿼리 앞에서도 집회를 했다. 노동자들은 전주고객센터를 직장폐쇄 하는 등 탄압으로 일관하는 사측을 강력히 규탄했다.

“저들은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이 애

도하는 기간에도 ‘영업! 영업! 영업!’만을 강요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외쳤다.

씨앤엠에서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파업 집회 중 스스로 삭발하며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삭발

“투쟁하기 전에는 새벽 6시30분부터 저녁 8시 넘어서까지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어요. 또 1시간 안에 접수를 처리해야 했고 온갖 패널티도 받았죠.

“그러나 이제는 ‘9시부터 근무라 10시부터 수리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성과를 되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투쟁에서 꼭 승리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정부가] 창조경제 한다면서 케이블방송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했어요. 대통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해요.”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로 무한 경쟁에 돌입한 케이블방송사들은 경쟁에서 이기려고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고 있다.

지나해 씨앤엠·티브로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는 등 투쟁으로 상당한 성과를 따냈다. 이 때문에 사측은 올해

는 노동자들에게 순순히 양보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듯하다.

그러나 지난 투쟁으로 경험을 쌓고 조직을 다져온 노동자들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사측이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화답을 할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은 6월 10일 이후에도 부분 파업을 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인간다운 삶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유병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씩어 빠진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LGUP)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근무,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60~70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내일이면 좋아지겠지’ 했지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받은 급여는 이놈이 떼어먹고 저놈이 떼어먹고 2백만 원 남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전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량유지비, 핸드폰 요금, 점심값 다 제외하니 1백여만 원 남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SKB 인천 조합원)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노조 활동 보장, 안전장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

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들어 주기는 커녕,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4대 보험을 일방으로 해지하고, 조합원들의 일감을 빼앗았다. 심지어 센터를 쪼개고, 삼성이 사용했던 폐업 같은 악랄한 수법도 쓴다. 6월 10일 SKB 대전서부센터가 폐업을 공고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투지를 다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조합은 계속 성장해 전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또, 노동자들은 각 센터에서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있다. 정식 출근 시간 이전에 잡히던 각종 회의와 조회가 노동조합이 결성된 후에 없어졌다. 점심시간이 보장되고, 각종 지표로 노동자의 등급을 매기는 일이 중단됐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은 6월 11~12일에 처음으로 원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단결 투쟁으로 이 썩어 빠진 현실을 바꿉시다.”(LGUP 마포센터 조합원)

이 집회에는 “선배 노조”인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지난해 우리도 노조를 만들고 싸워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길을 여러분이 걸어와 주십시오.”(티브로드 지부장)

“집회 내용을 들으니, 연대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집회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처지가] 똑같습니다. 이견희, 정몽구, 최태원 이 돈벌레들에 맞서 함께 싸웁시다.”(삼성전자서비스 부지회장)

이처럼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서로 고무하며 조직을 키우고 투쟁을 전진시키고 있다. 6월 18일에는 삼성, SK, LG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문화제가 열린다.

성지현



6월 11일 '진짜 사장이 나와라! SK그룹 규탄 결의대회'

학교 급식조리원 산재 사망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시스템의 “예고된 사고”

5월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달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화상 합병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매우 좁고 열악한 급식실에서 그만 끓는 물에 빠진 것이다. 비정규직 이어서 산재 적용도 못 받아, 치료비 2천5백여만 원에도 고통받았다.

고인은 5년간 급식조리원으로 일했는데, 2013년 기준 비정규직 급식조리원 5년차 평균 월급은 1백26만여 원에 불과하다.

더욱 처처구니없게도 관할 서울시교육청은 고인이 돌아가신 뒤에야 사고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본부 강원지부의 지적처럼, 이번 사고는 “일부 학교의 특수 상황이 아닌 불합리한 조리종사자 배치 기준, 충분한 휴식을 불가능하게 하는 학교 관리자들의 횡포, 고강도 노동에 의한 예고된 사고였다.”

서울의 급식실 노동자들은 오래전부터 적정 인력 충원을 요구해 왔다.

2013년 기준 급식조리원 1명 당 초등 학교 학생 수를 보면, 서울시는 1백88명으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서 둘째였다. 이는 제주도교육청(1인당 70명)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사고가 난 학교에서도 급식조리원 5명이 7백40여 명의 식사를 만들었다. 인원이 부족해 아파도 쉬지 못했다. 쉬어야 할 땐 벌금도 내야 했다.

벌금

“조리원들은 뜨거운 수증기나 기름으로 인해 화상을 입는 일이 다반사”이고 “무거운 숟가락을 들고 나르다 보니 근골격계 질환”도 많다. “더운 여름 땀뻘 끓는 솥 앞에서는 눈도 제대로 뜨기 어려움” 정도로 작업 환경도 열악하다.

이번 사고도 아픈데 무리해서 일하다 현기증이 나서 벌어진 것이었다. 사고 뒤에도 고인과 함께 일한 노동자들은 일하느라 장례식에도 참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급식실 개선 요구를 후

순위로 미뤄 왔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체제의 우선순위가 학교 현장에서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고, 이들은 임금과 각종 사회보험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사회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한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학교안전조례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하지 못한데, 아이들도 안전할 수 없다”며 “교육감 당선자들은 학교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전면적 실태점검과 노동환경 개선대책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많은 기대와 지지 속에 당선한 진보 교육감들이 선거 때 약속한 공약들을 실천으로 보여 줘야 할 때이다.

윤필연

전북버스 고(故) 진기승 열사의 염원

“억울한 해고가 없도록 톨톨 뭉쳐 투쟁해 주십시오”

지난 4월 30일,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항의해 목을 맨 신성여객 버스노동자 진기승 동지가 6월 2일 결국 운명했다. 고(故) 진기승 열사는 전북지역 버스 파업에 앞장섰다가 2년 전에 해고됐다. 신성여객 사측은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고인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모멸감을 줬다.

그러나 진기승 동지가 목을 맨 다음 날 해고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다. 원통하게도 고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고인의 자결 시도가 있던 날부터 투쟁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악질 관리자 처벌과 회장의 사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리고 탄압을 방조해 온 전주시에도 책임을 물으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신성여객의 사업권을 회수하라고 요구한다.

민주노총 신성여객지회 조합원 90여 명은 14일 동안 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 노동자들이 눈물로 호소하자,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이틀간 승무 거부에 동참했다. 이날 신성여객 시내버스는 단 한 대도 운행되지 않았다. 전북의 다른 버스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도 이어졌다.

세월호 참사 이후 기업주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에 대한 분노가 만연한 가운데 벌어진 이 투쟁은 많은 공감을 얻었다. “전주시의 버스 문제는 지역의 세월호”라는 인식이 지역에 확산됐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압박을 느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단이 버сту쟁본부 지도부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면담 직후 버сту쟁 지도부인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지도부는 승무 거부를 풀기로 결정했다.

전주시의 방기

고인의 동료와 가족들 앞에서 “내가 죽으라 했냐”는 막말을 서슴지 않은 신성여객 사측은 면담 후에도 책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신임 전주시장 또한 후보 시절 “직을 걸고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실질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마다 버스 회사들에 2백여 원을 지원한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관리감독을 방기하고 진기승 동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전주시와 전북 버스 회사들은 해경과 청해진해운 사이”와 같다고 말한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진기승 동지가 결국 사망하자, 분노한 신성여객 노동자들은 다시 승무 거부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방선거 당일 오전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다행히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런 탄압에 맞서 민주노총은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노동탄압 분쇄 전북대책위원회’를 전국대책위로 확대·재편하고 투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최근 사측은 부당해고와 진기승 동지 죽음, 노조 탄압에 대해 한마디 사과조차 없이 보상금 얘기만 흘리며 유족과 노조를 이간질했다. 그러나 버сту쟁 지도부는 사측의 진정한 사과와 책임 인정 없이 투쟁을 끝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 공영제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악질 사업주 처벌과 전주시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은 더는 탄압으로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다음 생에는 버스 기사가 대우받는 곳에 태어나고 싶다”는 고(故) 진기승 열사의 유언처럼, 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도 대폭 개선돼야 한다. 버스 노동자들은 격일제로 하루 15~18시간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이것은 버스 안전도 위협한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악질 사업주의 사업권을 회수하고 나아가 버스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은 엄청난 보조금이 사업주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버스 요금 인하와 버스 확충, 노동조건 개선 등에는 제대로 쓰이지 않는다. 버스 공영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버스 공공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이다.

소은화



5월 10일 '진기승 동지 캐류 기원, 노동탄압 분쇄 총력 결의대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이낸셜 타임스>의 피케티 공격이 진정 노리는 것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고, 8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 연설을 위해 방한한다.

칼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19세기 중반 영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사심 없는 연구자”에서 자본가 계급에게 “고용된 용병”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사례도 그런 경제학자들이다. 그들은 여전히 자본을 대신해 이데올로기적 계급투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의 전투는 5월 23일 저녁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며 시작됐다. 그 기사의 제목은 이랬다. “피케티의 연구 결과에서 오류가 발견되다: 잘못 계산된 록스타 경제학자의 불평등 증가 주장.”

다음 날에도 <파이낸셜 타임스>는 종이 신문의 1면 헤드라인과 안쪽의 한 면 전체를 할애해 피케티(하단 사진)를 공격했다. 이 기사는 주말 내내 <파이낸셜 타임스> 웹사이트에서 눈에 잘 보이게 배치돼 있었다. 세계 최고의 기업주 신문이 한 경제학자에게 이토록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드문 일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공격 대상은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21세기의 자본론》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였다.

복수

피케티의 논지는 자본주의를 그냥 놔두면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세 달 전 영문판이 나온 이후 피케티의 책은 커다란 관심을 끌었다. 특히 미국에서 그랬다. 그의 책에서 인용된 자료는 방대했다. 그의 책은, 경제적 불평등이 양차 대전 동안에 눈에 띄게 줄었지만, 그 뒤로 다시 커져서 지금은 1914년 이전의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입증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경제 담당 편집자 크리스 자일스는 피케티를 헐뜯었다. 피케티가 자료를 해석하고 표기하는 데서 초보적 오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일스가 그저 통계 자료에 관한 얘기만 하려 했다고 본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자일스는 긴축 정책을 극렬 옹호하면서 같은 신문사

동료인 수석 경제 논설위원 마틴 울프 같은 긴축 정책 비판자들에게 맞서는 인물이다.

얼마 전에도 통계 자료와 관련된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지난해 좌파 경제학자 세 명이 성장과 부채의 관계를 다룬 카르멘 라인하트와 케네스 로고프의 연구에 초보적 오류가 있음을 들춰냈다. 라인하트와 로고프의 연구 결과는 긴축 정책을 정당화하는 데 널리 쓰였었다.(▶ 관련기사: 본지 103호, ‘치명적 오류가 드러난 친시장 경제학의 긴축 정당화’를 보시오)

자일스의 피케티 공격은 이에 대한 복수로 보인다.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자일스의 피케티 공격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치안 활동이다. 자일스의 피케티 공격이 노리는 바는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을 들춰내는 학문적 연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무엇보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핵심 독자층은, 나 같은 소수 마르크스주의자를 빼면 부유한 기업주들과 그 측근들이다.

폴 메이슨이 말했듯이, “자일스가 옳다면 <파이낸셜 타임스>가 운영하는 잡지 <하우 투 스펀드 잇>(사치품을 선정적으로 소개하는 기사들로 거의 채워지는 잡지)에 광고되는 온갖 명품이 모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것들은 소수를 위한 사치품이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가 전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경청자

자일스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영국에서 부의 불평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보여 주는 데 특히 몰두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피케티를 공격하는 자일스의 악담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이나 브랑코 밀라노비치 같은 자유주의 좌파 경제학자들이 피케티를 방어하고 나섰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코노미스트》(<파이낸셜 타임스>보다 더 일관되게 자유시장 경제를 옹호하는 우파 성향

의 잡지)에 글을 쓰는 한 블로거가 자일스에 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그 블로거는 자일스의 비판에도 피케티의 전반적 주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한 최초의 인물 중 한 명이다.

자일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자일스의 작업은 그 문제를 충분히 설명하는가? 답은 명백히 아니오다.” 앞에서 말한 블로거는 오히려 이렇게 지적했다. 다른 연구 결과들은 “피케티의 수치가 사실은 부의 집중도

를 과소평가했음을 보여 준다.”

피케티는 자일스의 비판에 응답하며 강력하고 상세한 주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학자 하워드 리드는 자일스가 영국의 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단지 숫자를 둘러싼 논란이 아니다. 피케티의 정치적 결론은 소박하다. 그러나 그는 나쁜 정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구조적 논리 때

문에 불평등이 커진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썼다.

피케티가 자일스의 공격을 그렇게 쉽게 털어 버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 위기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피케티의 주장을 신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어도 이데올로기 차원에서는, 반자본주의 사상에 대한 경청자가 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07호 / 번역 이진화

MARXISM

14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마르크스주의 포럼

맑시즘

2014

8월 7일(목) ~ 10일(일)

장소 : 서울 주최 : 노동자연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 《자본》 해독
- 오늘날 제국주의를 이해하기
- 오늘날 국제 계급투쟁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이자 활동가다. 현재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며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자. 국내에 번역·소개된 책으로는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반자본주의 선언>, <무너지는 환상> 등 수십 권이 있다.

맑시즘2014의 경제 관련 주제들

- 《자본》 해독
-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 착취와 노동가치론이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 경제학의 기본 개념들] 무엇이 경제 위기를 낳는가
- 금융 세계화론, 어떻게 볼 것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과 혁명가 시리즈

레닌주의란 무엇인가	혁명가들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사상
• 레닌과 국가 • 레닌과 전략·전술	• 레닌과 제국주의 • 레닌과 정당	• 트로츠키와 연속혁명론 • 트로츠키와 반파시즘 투쟁 •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 • 《옥중수고》 이전 그람시 • 그람시와 《옥중수고》
마르크스주의의 방법		
• 소외 — 우리는 왜 월요일을 싫어할까? • 변증법 — 혁명의 대수학 • 역사유물론 — 저들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		•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 마르크스주의와 민주주의 • 아래로부터 사회주의 • 오늘날 좌파 개혁주의, 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정치

참가신청·문의

www.marxism.or.kr에서
전체 연사와 70여 개 주제를 확인하세요.

www.marxism.or.kr marxism@marxism.or.kr

02-2271-2395 010-4909-2026(문자 가능)

《21세기의 자본론》의 저자 토마 피케티

피케티,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

마이클 로버츠

본지는 지난 호에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책 비평 글을 실었다. 마이클 로버츠는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비평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하비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과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고 자신의 블로그(<http://thenextrecession.wordpress.com>)에 최근 경제 상황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하고 논평하는 글을 꾸준히 게재하고 있다. 블로그에는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여러 글과 자료의 출처도 있다.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논평의 타당성

데이비드 하비는 뉴욕시립대 대학원에서 인류학과 지리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교수이다. 하비는 최근 새 책을 냈고, 토마 피케티의 책을 논평하기도 했다.

하비는 피케티의 책에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래도 하비는 피케티가 매우 유용한 자료를 내놓았음은 인정했다. 자본주의가 지배적인 생산양식과 사회 관계로 자리잡은 1750년 이후 주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와 소득 불평등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잘 보였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통계 자료(우리가 그와 그의 동료들에게 감사히 여기는)를 통해 자본주의 역사 내내 자본이 전례 없이 극심한 수준의 불평등을 일으켜 왔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마르크스가 자신의 《자본론》 1권에서 제시한 이론적 결론도 정확히 그런 사실이다.”

그럼에도 하비가 지적하듯, 피케티는 자본주의에서 왜 생산 위기와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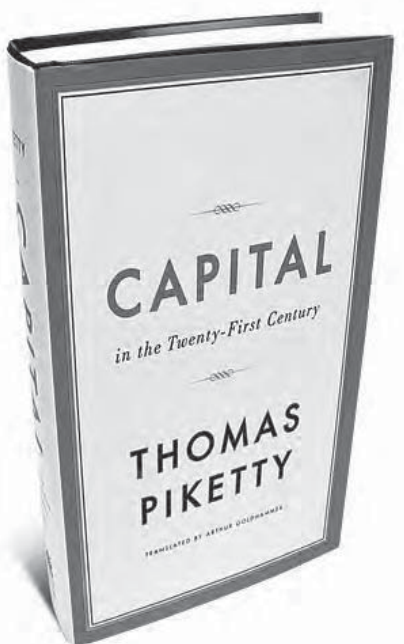
위기가 반복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하비는 다음과 같이 썼다.

“피케티의 책은 2008년의 위기가 왜 일어났는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랫동안 장기 실업과 주택 압류가 가하는 이중의 부담에서 헤어날 수 없는지를 말하지 않는다. 그의 책은 최근 미국 경제의 성장이 왜 중국과 달리 부진한 것인지, 유럽은 왜 긴축의 정치와 경제 부진에서 움짱달짝 못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

지 않는다.”

그리고 하비는 피케티가 마르크스를 읽어야 했다고 말한다.(나도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피케티가 마르크스를 읽었더라면, “《자본론》 2권(이 또한 피케티가 읽지 않은 동시에 별 거리낌 없이 일축해 버리는 책)에서 마르크스가 임금을 낮추려는 자본의 노력이 어느 순간이 되면, 자본이 만든 생산물을 흡수하는 시장의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과소소비가 아니라 이윤율 저하가 위기의 근본 원인

하비는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설명을 마르크스의 《자본론》 1권이나 3권이 아니라 2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설명되는 책은 사실 《자본론》 2권이 아니다. 주로 《자본론》 3권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 3권에서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과 그 상쇄요인들을 설명한다.

하비가 경제 위기의 원인을 ‘과소소비’로 설명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이 설명은 마르크스의 설명과 다르다.

아직 읽지 못했지만 읽어 볼 가치가 충분히 있을 새 책에서 하비는 이렇게 설명한다. “예컨대 재투자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자본을 축적하려는 충동, 가장 값싼 생산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 탓에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단(돈)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이다.”

실제로 하비는 경제 위기를 설명할 때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이 유용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하비는 이윤율을 늘리려고 1980년대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어떤 수학적 법칙에 따른 것”(아마도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법칙을 가리키는 듯하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비는 마거릿 대처의 경제 자문인 앨런 버드가 “무심코

털어놓은 진심을 인용한다.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은 “실업을 늘리는 매우 좋은 방법이었다고, 실업 증가는 노동계급의 힘을 꺾어내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었다. ... 마르크스의 용어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위기, 곧 산업예비군을 다시 창설하고 자본가들이 전례 없이 높은 이윤을 얻게 하는 위기였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은 오히려 1970년대 말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로 떨어진 이윤율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목표였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하비는 1980년대 초에 일어난 심각한 더블딥 경제 침체로 자본이

파괴되고 그 가치가 하락해 이윤율이 회복된 것이 신자유주의 정책과 무관하다고 여긴다. 하비는 오히려 “정치가 작동한 결과였다”고 말한다.

하비는 임금목이 줄고 그로 말미암아 ‘과소소비’가 나타날 위험성이 가계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 상쇄됐다는 점을 피케티가 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바로 수요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피케티는 이 문제를 체계적으로 무시한다. 1990년대에 이 문제는 서브프라임 시장에 담보대출 자금이 많아지는 등 신용이 막대하게 확장되며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자산 거

품이 2007~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신용제도 붕괴로 터지게 됐다.”

요컨대, 하비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수요 부족으로 본다. 신용 거품이 수요 부족을 상쇄할 수 있었지만 일시적으로만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비는 다음과 같이 옳게 주장한다. “경제 위기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다. 비록 경제 위기를 촉발하는 방아쇠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제 위기로 표현되는 변화는 지질학에서 말하는 대륙 이동처럼 수년에 걸쳐 진행된다. ... 경제 위기의 과정을 돌아보면 위기가 완전히 발현되기 꽤나 전부터 여러 징후가 나타났음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하비는 위기의 징후를 이윤율의 변동이 아니라 신용의 변동에서 찾는다. 하비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대에 부채가 한 없이 늘고 국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는 자본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고 세계 곳곳에 위치할 수 있게 해서 [국내에서 일어나는] 노동과의 갈등을 해소시키려는 목적의 방편이었다. 이런 추세는 2008년 9월 15일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몰락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8년 미국 경제 위기 때 은행에 압류된 주택의 모습.

또한 자본은 부(富)와 같은 말이 아니다

하비는 피케티가 “자본을 잘못 규정”한 것이 핵심 문제라고 올바르게 지적한다.

“자본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다. 자본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사용하는 순환 과정으로, 대개 노동력을 착취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과정이다. ...

“신고전학과 경제 사상(피케티 사고의 토대) 전체가 동어반복에 기초하고 있다. 자본수익률이 얼마나 될지는 결정적으로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될지에 달려 있다. 자본의 가치가 그 자본이 생산한 것으로 측정되는 것이지 그 자본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것으로 측정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임스 겔브레이스와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적한 바 있다. 피케티는 자본과 ‘부’가 같은 것이 아님을 보지 못한다. 자본과 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하비가 말했듯, 자본을 측정할 때 주택과 부동산 같은 부를 제외하면,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크리라는 피케티의 전망은 허물어진다.

에스테반 마이토가 새 논문에서 바로 이 점을 증명한다. 마이토는 피케티가 사용한 자료를 사용해, 피케티의 자본수익률 법칙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 현실에 더 잘

들어맞는다는 것을 밝혔다.

마이토는 이렇게 설명한다. “피케티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은 생산이나 가치 증식 과정과 관계가 없다. 피케티에게 자본은 ‘부’와 같은 말로,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뜻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을 자본주의 생산과 관련지어 설명했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의 타당성을 검증하려면, 설사 경험적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본의 기본 개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주택’을 자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생산수단이 아니라 소비재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금융 자산’(생산 없이 화폐가 증

식하는 M-M’)이나 ‘토지’도 마찬가지이다.”

게다가, 최근 시기(호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1960년 중반 이후) 내내, 심지어 피케티가 말한 자본수익률도 마르크스가 말한 이윤율과 함께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체 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기계류나 비주택 자산에 견줘 줄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피케티의 자본수익률도, 하비의 ‘소비 수단 부족’도 아니다. 바로 마르크스의 이윤율 저하 경향 법칙이다.

출처 마이클 로버츠 블로그 / 번역 최병현

이윤율

이윤율을 투자자본으로 나눈 값. 자본주의에서는 이윤의 원천인 노동자에 비해 기계, 원자재 같은 ‘생산수단’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져 이윤율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북·일 대화는 점차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 5월 28일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김영익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아베가 말이다.

북·일 합의에 나선 일본의 계산은 복잡하다. 우선, 일본 국내에서 납치 문제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쟁점이다. 그래서 아베 내각은 과거 북한이 저지른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핵심 과제로 여겨 왔다. 아베 자신이 고이즈미 내각 시절에 이 문제에 앞장서 총리로 가는 길을 닦은 자다.

그러나 아베의 의도는 더 근본적인 이해관

계와 연결돼 있다. 아베는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에 견제구를 던지려는 듯하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치열한 제국주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두 국가 간 지정학적 경쟁 강도는 점차 높아져,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일본이 국지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이 됐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도 치열해졌다. 예컨대 일본은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적극 접근하고 있다. 중국도 이에 맞서 해당 국가들에 강경하게 맞대응하곤 한다.

외교전

한반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아베 내각은 입지가 다소 좁아진 상태였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 등으로 한국 정부와 관계가 소원해졌다. 지난 3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아베는 박근혜와 정

상회담을 하지 못했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은 박근혜와 4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중국의 대북 영향력도 커져 왔다. 중국이 북한 나진항에 진출한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중국은 나진항을 통해 동해를 거쳐 태평양으로 나아갈 출구를 확보하는 데 꾸준히 관심을 보여 왔다.(비슷한 목적으로, 러시아도 나진항에 관심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는 한반도에서 중국을 견제할 수단 중의 하나로 북·일 대화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 처형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북한 지배자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지는 데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본지 118호 '장성택 처형 - 지배 판도 핵심부의 위기와 체제의 모순을 드러낸 사건'을 참조하시오.) 일본이 북한을 중국의 지정학적 확장을 저지할 지렛대로 쓰는 데 관심을 가질 법도 한 상황이다.

북·일 합의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줄까?

일본의 대외 정책이 미국 제국주의에 일방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여겨 온 사람들은 이번 합의에 많이 놀랄 법하다. 그러나 비록 냉전 때부터 일본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구실을 해 왔지만, 일본 또한 제국주의 강대국으로 독자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헤게모니 아래에 두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일본이 대외 정책에서 미국과 다른 행보를 할 여지도 커졌다.

그럼에도 이번 합의는 2002년과 2008년의 북·일 합의처럼 얼마 안 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우선, 일본의 대북 정책이 일관되게 전개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전이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일본의 대북 정책은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 일례로 2002년 당시 일본 총리 고이즈미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일 대화가 진전됐다가, 미국이 북한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중단된 바 있다.

미일 동맹

또한 지금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전력질주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 대국화를 향한 외교·안보적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를 관철하는 데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은 여전히 유용한 명분이다.

무엇보다 일본 지배자들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일 동맹 강화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미일 동맹의 날개를 근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 지배자들은 북·일 대화를 마뜩잖게 생각하는 미국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국무부 대변인 젠 사키는 일본이 “투명한 방식”으로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너무 독자적으로 북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일 대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합의는 북·일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경색된 한반도 정세를 바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계기로 6자회담 재개 및 남북 관계 진전 노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한겨레〉 5월 31일자 사설)

그러나 이 기대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아베와 김정은 모두 평화와 인권에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북한 지배자들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인한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뿐이다. 북한이 군사 대국화를 향해 폭주하는 아베와 대화에 나선 것은 북한의 ‘반제국주의’가 어디까지나 미사여구를 보여 준다.

북·일 합의는 점차 다국화하는 세계 질서 속에,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의 상호작용이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안정이나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림이다. 오히려 불안정 속에 장기적으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다.

타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타이 군부는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22일에는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타이 국왕은 재빨리 쿠데타를 승인했다. 그가 재임하며 승인한 16번째 쿠데타다.

군부를 비롯한 ‘반(反)탁신’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을 총리직에서 제거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타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는 게 불가능해지자 이들은 선거를 거추장스럽게 여겼다.

쿠데타 과정을 보면, 먼저 중간계급 중심의 보수적 정당파 집단 ‘노란 셔츠’들이 군부 등의 지지를 받으며 도로와 정부 청사들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둘

렀다. 이 과정에서 20여 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 그러자 반탁신 지배계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지난 총선은 무효라고 선포하고 총리를 해임했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자 군부는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는 민정 이양 의사가 없다.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바로 현정을 중단했다. 새 헌법을 만들고 선거를 치르려면 적어도 1~2년이 걸릴 것이다. 그 뒤에도 군부나 군복을 벗은 군인이 계속 정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다.

쿠데타 정권을 유지하려면 탄압이 필수다. 군사정권 최고 권력기관인 국가평화질서회의(NCPO)는 “현재 현정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

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집회를 금지하는 계엄령을 위반하는 시위자들을 즉시 체포할 것이다.”

타이 군부는 아직 시위를 강경 진압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요 반쿠데타 인사들에게 왕실모독죄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왕실모독죄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반대파를 탄압하는 악법으로,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다. 국왕이 승인한 군부 쿠데타를 반대하면 왕실모독이라는 것이다.

해외에 망명한 ‘붉은 셔츠’ 지도자들에게도 소환장을 발부했다. 최근에는 국가평화질서회의의 의장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왕실모독 혐의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라고 육군에 지시했다. 지금까지 4백여 명이 군부에 의해 소환됐

고 1백 명은 여전히 구금 상태다.

저항

그러나 타이 민중은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다. 영화 〈헝거게임〉에서 따온 ‘세 손가락 시위’(저항과 연대의 상징)가 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거리 대중 행동은 미미하다. 최대 1~2천 명이 모여 짧게 시위를 하고 금방 해산하는 기습 가두 투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2006년 쿠데타 이후 타이 민중은 ‘붉은 셔츠’ 운동으로 저항에 나섰다. ‘붉은 셔츠’ 운동은 민주주의를 요구했고 참가자 대다수는 도시와 농촌의 빈민이었다. 그러자 군대가 2009년 5월 ‘붉은 셔츠’ 시위대를 향해

충격을 가했다. 백여 명이 죽고 수천 명이 다쳤다. 방콕이 피로 물들었다. 하지만 ‘붉은 셔츠’의 거센 저항 때문에 군부는 일시적으로 후퇴하고 선거를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선출된 정부가 다시 쿠데타로 전복된 것이다. 타이 군부 등 지배계급은 쿠데타에 맞선 저항이 재현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러나 타이 민중도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지난 5월 29일 한국에서도 민주노총, 노동자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등 18개 단체들이 모여 쿠데타에 항의하고 탄압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였다. 타이의 투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최용찬

독자편지

6월 25일(수)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는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지면이 넘쳐 실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에 실습니다.

ws@wspaper.org

현대차 노동자들의 삼성서비스 투쟁 지지 모금

얼마 전 노동자연대 현대차 모임은 현대차 현장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삼성서비스 노조 투쟁 지지모금을 받았다.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골이 탈취당한 일, 지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힘든 투쟁 상황을 알리며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금한 36만 3천

원을 삼성서비스 노조 사무장 동지에게 전달했다. 노조 밴드[SNS의 일종]를 통해 고맙고 감사하다는 답신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모금 전달 내용과 답신 내용을 현장 조합원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사실 나는 모금 운동은 처음 해보는 거라 부담감도 많았고, 주·야간 근무조 모두에 모금하려고 4일간 조기출근하기도 했다. 그런데 의외

로 많은 동지들(40명!)이 호응해 줘서 힘들고 조심스러웠던 심리적 부담감도 있을 수 있었다. 모금에 동참해 준 동지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이 동지들과 동지적 관계를 잘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불씨가 더 커져서 삼성서비스 투쟁에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김성수 현대차차부 조합원

박근혜 반대 행동을 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울산에서는 '탐욕의 자본·박근혜 퇴진 세월호 물살에 분노하는 노동자행동' 현대차 단위 모임(이하 단위 모임)이 구성됐다. 단위 모임에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금속노동자민주연대, 1공장 무소속 활동가 모임, 3공장 학습 모임, 열사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연대 현대차 모임 등 현대차 노동자들의 모임들이 참가했다.

단위 모임 활동가 30여 명은 현대차 공장 안에서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점심시간마다 박근혜 퇴진 서명을 받았다. 이 서명을 모아 지역의 진보 신문에 박근혜 퇴진 노동자 선언 광고를 내려고 한다.

나는 기업 규제 완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박근혜 정부가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윤 때문에 불법파견을 저지르고 통상임금을 때먹으려는 현대차 사측과 정부를 비판하며 싸우자고 주장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호응해 줬다.

줄을 서서 서명할 정도로 많은



박근혜 퇴진 서명에 나흘 만에 1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12일까지 1천1백10명이 서명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서명에 동참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것이다.

또 이렇게 현대차 안에 여러 모임들이 함께 공동 캠페인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함께 세월호 참사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박근혜 퇴진을 주장한 것도 의미 있었다.

정동석 현대차차부 조합원

퀴어문화축제에서 확인한 연대의 가치

얼마 전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지인과 길을 걷던 중 있었던 일이다. 행렬 사이로 높이 올라간 '노동자연대' 깃발을 보고, 지인이 물었다. “노동자연대’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밝혀두자면, 지인은 노동자연대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 단체에 반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인은 단지, 다른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 사이에 '노동'과 '연대'를 이름으로 한 깃발이 있는 것을 꽤나 신기해했을 뿐이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언급해야 할 것이 있다. 이 글을 쓰는 나는 동성애자다. 어떤 글을 쓰며 매번 나의 성적 지향을 밝혀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나는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한 동성애자이며, 어버이연합이나 보수 종교 단체의 시위에 막혀 행진을 하지 못한(하지만 결국 성공한) 동성애자이다. 나는 평소엔 내 정체성을 숨기고 살지만, 축제에서 나와 같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든든해하던 사람이며, 동시에 나와 다른 정체성의 누군가가 나를 혐오하는 것을 보고 서러워한 사람이다. 지인은 다른 의미로 노동자연대의 깃발에 주목했다면, 이런 내게도 그 깃발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서로 다른 이유로 들린 여러 촛불들, 그리고 그 사이의 깃발을 보며 항상 생각하곤 했다. '당사자에게 과연 저게 어떤 의미일까.' 물론 사회적 연대의 움직임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생전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가 깃발을 들고 내 광장에 서 주었을 때, 그 깃발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나는 항상 궁금했다. 든든할까? 혹은 의문스러울까?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보듬

고,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나를 지지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퀴어 퍼레이드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던 내가 당사자의 자리에 서는 경험이었다. 나와 같은 소수자들을 확인했지만 나를 반대하는 다른 이들을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생뚱맞을 수도(?) 있는 노동자연대의 깃발은, 내게 가슴 벅찰 정도의 힘을 안겨 줬다. 성소수자 단체가 아니라도, 당신들의 옆에는 당신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누군가가 있다, 당신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맞서고 대항해 줄 누군가가 있다, 그 깃발은 그렇게 말해 줬다.

용기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이름만 다른 또 다른 당사자들, 밀양, 강정마을, 삼성서비스 노동자 동지들,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 동지들, 세상 그 모든 힘없는 서로 다른 당사자들이 군중 속에서 깃발을 발견했을 때, 그런 용기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하고, 노동자연대의 붉은 깃발은, 내게 희망을 준 무지개 깃발의 한 축에 당당히 자리해 주었다.

이듬해, 노동자연대의 깃발을 발견한 지인이 내게 또 질문한다면, 나는 이 장황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해 주고 싶다. 그리고 연대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내가 얻은 용기와 힘을 이야기해 주고 싶다. 이 힘을, 세상 모든 다른 당사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사족으로 덧붙이자면, (내 기억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퍼레이드에서 본 깃발 중 '노동'과 '사회주의'를 내건 깃발은 노동자연대의 깃발이 유일했다. 연대의 힘을 실어 준 노동자연대에 큰 감사를 보내고 싶다.

이성주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지난 6월 5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 대책위(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주최하고 여러 학생단체들(한국대학생연합, 서울 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학생행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 공동 주관한 2014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가 이화여대에서 열렸다.

경기대, 대전대, 한림대, 배화여대, 항공대, 성공회대, 경희대, 한양대, 인하대, 인천대, 단국대 등 구조조정 쟁점이 있는 곳의 학생들이나 학생회 활동가들이 대거 참가했다. 배화여대 전통의상학과 학생들은 단체로 한복을 입고 와 자신들의 학과 폐과 문제를 알렸다. 학생 80여 명 외에도 성균관대와 이화여대에서 강의하는 비정규 교

수도 참가했고, 교수노조와 대학노조도 연대사를 해 주기 위해 참가했다.

구조조정의 문제를 알리는 영상을 시청한 후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소속 양기원 활동가가 발표했다. 양기원 활동가는 대학 구조조정의 진정한 배경은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라기보다 대학이 등록금 수익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구조개혁 대상은 학생이 아니라 대학 자본이며 대학 정원감축이 아니라 재단의 이월적립금 환수 등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여러 학생단체들이 대학구조조정에 어떻게 맞서야 하는지 발표했다. 각 단체 활동가들은 정부와 대학 당국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명분과 논리를 잘 반박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구

구조조정하면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한 대안의 중요성도 토론됐다. 또 구조조정에 맞서기 위해 교수, 학생, 대학 노동자들과의 연대와 단결이 중요하다는 점,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대학 구조조정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지역대책위를 건설하고 9월 말 큰 집회를 열자는 의견도 나왔다.

저항 경험

투쟁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에는 임승현 경기대 총학생회장이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학과 구조조정에 맞서 경기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생생하게 발표했다.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분개한 학생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한림대 사학과 남현우 씨는 “우리 과가 통

폐합된다는 사실을 신문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며 “총학생회에서는 이 문제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답답해서 토론회에 왔다” 하고 말했다.

발표자들의 연설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조를 나누어 분임 토론을 진행했다. 조별 토론회에서는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해 학생들이 어떻게 반박하는 것이 좋을지, 학내 구성원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하는지 등을 토론했다. 저녁 늦게 토론을 시작해 토론시간은 짧았지만 여러 조들에서 서로의 고민과 경험을 나누는 의미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조별 토론회에서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학교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수원캠퍼스의 총장실

을 점거하고 수원캠퍼스 학생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을 공유했다. 조별 토론회가 끝난 후 조별로 한 명씩 나와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도 있었다.

고은총 단국대 총학생회장은 “대학 구조조정이 거의 매해 일어나므로 총학생회 등 학생 대표가 매년 바뀌더라도 학교 단위나 학과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서정은 활동가는 “각 대학들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관련 경험들을 일반화시켜 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에 대항할 논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했다.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아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장호중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버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형평성’을 위해 ‘의료법인’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전 정부들이 부대사업 허용, 비급여(비보험) 허용 등으로 영리 추구의 길을 열어 줬 온 것이다.

그런데 대학병원들은 이런 법조차 어겨가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정부는 이를 못 본 체하다가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려 한다.

정부는 의료법의 부대사업 조항을 내버려 둔 채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대폭 허용하는 꾀수를 썼다. 이런 꾀수가 가능한 것은 의료법에 복지부장관이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자회사)”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다.

현행법조차 여기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고삐를 당길 때다.

부대사업 확대 쇼핑몰에 병원 간판 달기

이번 개정안에서는 병원이 직접 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숙박업, 서점 등을 별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보장구 등도 만들어 팔 수 있다.

게다가 병원이 자기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빌려 줄 수도 있다. 그것도 법에 명시된 사업 외에는 다 허용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리스트)

정부는 이런 부대사업이 ‘치료’와 관계없기 때문에 의료비 상승을 낳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원이 수영장(체육시설)과 스파(목욕장업), 척추에 좋은 의자(각종 보장구) 등을 팔 수 있게 하면, 의료진이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권할 수 있다. 의료진과

환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환자들에게는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

아예 병원 건물 한편을 차지하고 있으면 환자 입장에서 치료의 일부로 여기게 될 것이다.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기능성” 의류, 식품, 각종 미용 서비스를 팔기 유리해지는 것이다.

건강보험 축소

정부는 ‘건강보조식품’ 등 일부 사업자에게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한다. 그러나 건강보조식품의 규정 자체가 모호하다. 정부는 언제든 그 기준을 바꿀 수 있다. 최근에도 정부는 심박수 측정 기능을 갖춘 삼성 갤럭시S5 출시를 위해 식약처 고시를 개정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호텔업자가 의료

관광을 유치하는 ‘메디텔’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메디텔 내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싼 병실을 갖춘 병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대’ 비용이 늘어 전체 병원비가 크게 오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한편, 민간보험사가 이런 부대사업을 보장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병원비에서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더 커질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보다 민간보험이 더 절실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민간보험의 구실을 대폭 커지면 건강보험 제도는 반대로 위축될 것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는 7월 22일을 전후로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6월 27일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노동조합 등은 민주노총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6월 28일에도 공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심중팔구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철밥통’,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하는 집단 이기주의’ 같은 딱지를 붙

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야말로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자본가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정책이다. 이에 맞선 투쟁은 의료비 폭등, 의료의 질 악화, 공공병원 폐쇄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월호 참사로 터져 나온 대중적 항의를 결집시키는 구실이 될 수 있다.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지난해 철도 파업처럼 말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과 지역 대책위들도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활동을 광범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향해 포문을 연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이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외국인환자 유치용? 영리 병원 도입을 위한 수순 밟기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을 신설”하겠다고 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퍼센트에서 11.2퍼센트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 현재 외국인 환자 병상 점유 비율은 0.9퍼센트밖에 안 된다.

실제로는 외국인 유치를 명분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고급 병실을 만들려 하는 듯하다. 이러면 병실료(입원비)가 전체적으로 비싸진다.

지난해에는 국내 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장차 국내 보험사가 내국인을 특정 병원으로 유치·알선하는 디딤돌 구실을 할 수 있다. 한미 FTA 등에는 국내 기업과 미국 기업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는 의료에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으로 유인·알선할 수 있게 되면 병원들은 삼성생명의 진료 지침을 따르게 된다. 삼성생명이 돈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하는 ‘일반 기업’이다. 이들의 진료 지침에서 환자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리병원이 도입됐다.

병원 인력 확충, 공공병원 확대!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주차장, 식당, 장례식장 등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병원 인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 간호사 수만 해도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보호자들이 환자를 돌봐야 하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는 주차장, 식당 등이 많이 필요해진다. 장례식장도 병원 밖에서 이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대사업이 아니라 병원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 적절한 간병 서비스가 제공되면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할 이유가 없어진다.

진주의료원에서 운영하던 ‘보호자 없는 병동’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 장례 비용을 전액 보장하고, 병원을 오가는 무료 교통편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부대사업이 불필요해진다. 이렇게 생긴 ‘착한 적자’는 부자와 기업주들에게서 세금을 거둬 얼마든지 메꿀 수 있다.

홍준표는 이런 대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지난해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통합하고 진료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새누리당이 주도해 강릉의료원과 원주의료원을 매각하려 한다.

공공병원 파괴는 우리가 막아야 할 가장 노골적인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